

자체 반성, 사회 요구 맞물려 노사 의견일치

방송사 윤리강령 제정 바람

YTN은 노조의 제안을 신임 사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방송사 중 가장 빨리 윤리강령을 발표했고,
KBS도 정연주 사장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여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이 두 회사는 최근 노조에서
추천한 인물이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으로 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배경의 한 축은 연예계 금품비리와 패스21 주식 수수 등 언론인(혹은 방송인) 윤리 문제가 2002년 언론계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데 대한 자발적인 반성의 가시화다. 다른 한 편으로는 부폐방지위원회가 만든 공직자 윤리강령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비리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한 곳은 MBC로 윤리위원회를 노사 합의로 설치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올 3월에는 SBS노조가 사측에 윤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출발은 늦었지만 YTN은 노조의 제안을 신임 사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방송사 중 가장 빨리 윤리강령을 발표했고, KBS도 정연주 사장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여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이 두 회사는 최근 노조에서 추천한 인물이 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으로 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YTN, 전직원 대상 윤리강령 채택

방송사들이 윤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천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회사 내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뼈를 깎는 반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했는가(혹은 하고 있는가), 아니

YTN은 지난 6월 20일 노사 공동으로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을 채택, 선포했다.
표완수 사장(왼쪽)과 우장균 노조위원장이 선포식 후 악수하고 있다.



면 대외적인 분위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례적 형식을 차리는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윤리강령을 확정해 발표한 곳이 YTN뿐이라 내용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각 방송사마다 진행되는 과정 자체만 보더라도 그 수준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느낌이다.

방송사 중에 가장 빨리 움직인 곳은 YTN이다. YTN은 지난 6월 20일 노사 공동으로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채택해 선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지난 5월 표완수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윤리강령 제정을 공식 제안했고, 표 사장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30일 김경한 전 제작2팀장이 경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천 만 원의 현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터진 것이 일종의 기폭제가 됐다. 즉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커지면서 별다른 반발 없이 약 한 달만에 일사천리로 합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장균 YTN 노조위원장은 “이번 비리 사건으로 직원들이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윤리규정이나 윤리위원회가 미리 준비돼 있었더라면 좀 더 분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다.”고 말한다.

이번 윤리강령은 노사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카메

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했다.

실천요강에는 촌지, 전별금, 어떠한 형태의 금품, 유가증권, 향응, 접대, 무료여행 등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만 취재활동에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등을 예외 기준으로 두어 다소 모호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우장균 노조위원장은 “이번에 윤리강령을 마련한 것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계도를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 조항보다는 광범위한 수준으로 담았으나 개별 기자들의 양식에 맡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강령과 함께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윤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임직원을 비롯한 YTN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이 실천해야 하며, ‘신입사원 교육 때 윤리위원회의 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까지 두었다.

KBS 편성규약과 함께 방송의 날 발표

한편 KBS는 7월 22일 정례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노사가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

KBS는 지난 해 패스21 사건 때 노조를 중심으로 윤리강령 제정이 이슈화됐었으나 추진되지 못하다가 올 해 새 사장이 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연주 사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의 결단으로는 촌지를 뿌리치기 힘들다. 집단의 윤리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기자간담회나 임원회의 등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에는 KBS 방송문화연구소(이하 방문연) 주최로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KBS 윤리강령'을 주제로 한 사내 포럼을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창룡 인제대 교수, 정연구 한림대 교수, 유일상 건국대 교수 등의 외부인사와 윤리강령 초안을 마련한 탁재택 연구원을 비롯한 방문연 관계자, KBS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포럼에 참가하지 못했던 노조 측이 7월 10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윤리규정은 노사가 공동발의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준비과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KBS 노사는 현재 운영 중인 편성규약개정소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또한 방문연에서 마련한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현석 공추위 간사는 “윤리위원회 설치 등 쟁점이 되는 몇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윤리규정은 개정된 편성규약과 함께 9월 3일 방송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탁재택 박사와 함께 초안을 준비한 김희철 기자(방문연 소속)는 “이번 윤리강령은 다른 언론사들보다 더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되는 공영

방송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적용대상도 KBS 전 직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권오훈 공추회 간사는 “규정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도덕률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의 징계 및 제재 조항, 그리고 노사 동수의 윤리위원회 설치까지 담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언론인 정계진출 제한, 경제담당기자의 주식보유 제한, 협찬 등의 규정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계도 엄격해야 한다. 프로그램 출연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같은 것은 해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조합원이라도 비리 연루자는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노조측은 자신들이 제안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나선 점에 대해서는 미리 챙기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KBS 노조는 편성규약 개정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고 밝혔다. 권 간사에 따르면 “회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많아 노예문서라고도 불리는 편성규약을 사내 개혁 분위기에 맞춰 제작자율성의 보장과 제작진의 권한 확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 동수 윤리위 구성한 MBC

사실 윤리위원회 설치로 따지면 MBC가 가장 먼저다. MBC 노사는 이미 지난 해 10월 11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구성은 노사가 추천한 6명으로 하되 노사 각 1인의 대표를 상설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는 윤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윤리강령 무색” “있으나마나 한 윤리강령”식의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는 기사를 쉽게 접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일말 기대를 거는 것은 진작에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해온 언론사들은 비리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외부인사도 포함 가능하다고 규정에 두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내 윤리강령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제청.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 조사 및 심의 결과의 인사위원회 통보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허위진술에 대한 조치와 관리자의 책임 등도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사실상 MBC 윤리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라 비리 사건 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즉 사전 감시 기능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상시적 윤리위원회라는 점은 YTN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해 김창룡 교수는 “윤리위원회가 항시 체제로 감시할 것이다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현실적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상설기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정책기획팀 최기화 차장은 지난 90년에 제정한 방송강령의 개정 작업을 오는 9월부터着手하겠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윤리강령을 별도로 준비하기보다 방송강령 안에서 윤리준칙부분을 신설하든지 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SBS는 지난 7월 4일 노사가 함께 윤리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필 SBS 노조 사무장은 “내년 3월 목동사옥 이전에 맞춰 발표할 것이며,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술했

지만 SBS노조는 지난 3월 회사측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윤리강령을 만든다고 해서 언론인 비리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윤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윤리강령 무색” “있으나마나 한 윤리강령”식의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는 기사를 쉽게 접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일말 기대를 거는 것은 진작에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해온 언론사들은 비리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KBS 윤리강령’이라는 KBS 사내 포럼에서 “윤리강령 같은 규범은 사회의식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식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허구요 관념이요 혀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윤리강령은 구성원들을 도덕적으로 결속시키고 태고난 사람마다의 자주성을 드높이고 언론인들을 고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관건은 ‘제대로 된 윤리강령’인 셈이다. ‘제대로’의 의미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대상자들이 그 취지를 얼마나 공감하고 지킬 자세를 갖추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어쨌거나 세밀 언론계 뉴스를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더 이상 언론인 윤리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